



보도시점 2026. 1. 16.(금) 15:30 배포 2026. 1. 16.(금) 14:00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인구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 5대 구조적 리스크(AI 대전환, 양극화 등)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전문가 간담회
- 인구위기 대응은 5대 리스크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다뤄져야할 과제이며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통로
- 전문가들은 저출생·초고령화 대응 및 축소사회 적응 방안 제안과 함께 재원 마련 등 실천력 담보 방안을 염두에 둘 것을 제안
- 향후 중장기 시계(2030년, 2030년+@)의 “전략목표-성과지표-분야별 과제”를 설정하고, 단기 추진가능한 과제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 계획

기획예산처는 1월 16일(금) 14시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문가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6.1.16.(금) 14시~15시 /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
- (참석자) 정부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미래전략실장, 통합성장기획관 등  
전문가 이철희 교수(서울대), 최슬기 교수(KDI), 이삼식 원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김태일 교수(고려대), 김승택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 김학수 선임연구위원(KDI),  
이윤경 선임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 유민이 연구위원(이민정책연구원),

기획예산처는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해 국가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 부처로 올해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우리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시계(중기: 2030년, 장기: 2030년 + @)의 국가 비전을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오늘 간담회는 첫 번째 주제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학계의 폭넓은 의견을 경청하고, 중장기 인구전략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① AI 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② 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③ 탄소중립  
④ 양극화, ⑤ 지역소멸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가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1/3수준으로 이 추세로 3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현재의 3% 수준이 되고, 북한은 침공할 필요없이 넘어오면 된다.’ 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으로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아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3을 상회하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50년에는 15~64세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대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미 생산연령인구 감소, 교육·국방 등 부문별 축소화 등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인구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문제 해결은 향후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인 정년연장, 대학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난제임을 지적하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양보, 연대 등을 통한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응은 초혁신 경제와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통로”임을 강조하였고, 전문가에게 따끔한 조언과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전문가들은 ▲먼저 ‘한국인 늘리기’ 관점에서 출생아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보편화, 출산의 제도적 편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유인구조 정립,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고,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증가에 대응하여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정년의 단계적 연장 등 고령자 고용 개선, 지역단위 통합돌봄 등 건강·돌봄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제안하였다.

축소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우선 인구변화 양상·속도에 따른 부문별 전략 및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민간 R&D 지원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시스템 개편, 이직·실직자 재고용 서비스 등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확대, 직업군별 귀화 패스트트랙 마련 등 이민정책 개선도 제안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임 직무대행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①중장기 국가전략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해 나가고,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②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 방향을 발굴·구체화, ③단기적으로 추진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실 인구구조혁신과	책임자	과 장	나윤정 (044-214-1730)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halanadriid@korea.kr)
			사무관	오상혁 (dhtkd23@korea.kr)

